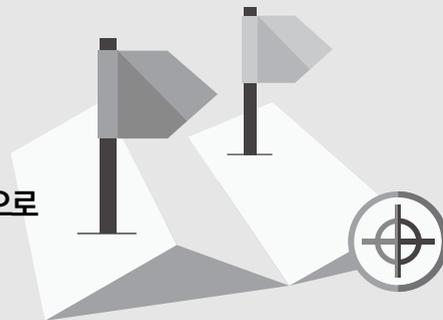


이달의 초점

북한 주민의 생활 변화와 함의: 식량과 영양을 중심으로



김정은 시대 북한 가계소득 변화와 함의
조성은

북한 식량 수급의 변화와 함의
최용호

북한 주민의 식생활과 영양 섭취
김예슬·조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김정은 시대 북한 가계소득 변화와 함의¹⁾

Changes in North Korean Household Income in the Kim Jung-eun Era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조성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종합시장 발달, 중국무역 확대, 제조업 성장 등을 배경으로 일반 주민들의 비공식 소득 창출 기회가 크게 늘어났다. 이에 일반 가구의 가계소득 대부분을 비공식 분야에서 얻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재 시장, 서비스 시장, 사금융 시장, 주택 시장 등이 확대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시장이 형성되어 비공식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시장의 발달은 단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생산’과 ‘소득’을 동시에 증가시켰다. 다양한 형태의 돈벌이와 직업을 창출했고, 노동시장이 유연해지면서 다양한 소득 계층이 등장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북한 가계는 절대 빈곤 상황에서 벗어나 나름의 경제활동을 기반으로 소득과 자산을 늘려가고 있지만 이 변화는 고르게 나타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불균등하게 실현되고 있어 북한 내 계층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눈높이 상향에 맞는 교류·협력 사업 대상과 내용이 필요하며, 계층화에 따라 발생하는 격차를 염두에 둔 영양 지원 등 미시적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향후 남북 교류·협력의 핵심은 단순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넘어서 북한의 낙후된 지역의 종합적 개발, 북한 인적 자본의 향상과 같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기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들어가며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남북 관계는 상당 기간 냉각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미국의 대선 이후 새로 집권한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까지 북한과의 관계

1) 이 글은 조성은 외. (2021). 남북한 사회격차 완화를 위한 북한의 의식주 생활 지표 분석(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일부를 수정·요약한 것이며, 주요 자료원은 (주)NK투자개발에서 해산, 원산, 평양, 신의주, 평성, 순천 등 6개 지역의 내부 소식통으로부터 수집한 비공개 자료이다. 북한 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교차 검증에 한계가 있어 주관적 경험의 편의(偏倚)가 있을 수 있다.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고, 2022년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아직까지 남북 간의 대화 중단은 여전하다. 향후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한 공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장애물은 산적해 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북한은 신속히 국경을 봉쇄하고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와의 무역과 교류를 중단하였다. 2022년 초 중국과의 철도 운행을 비정기적으로 일부 재개했지만 5월 북한 내 코로나19 감염을 공식화하면서 전면적인 국경 개방은 기한 없이 미뤄지고 있다. 경제 상황이 넉넉지 않은 북한의 현실을 고려할 때 극단적 봉쇄정책은 북한의 고립과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지만,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북한 체제가 흔들릴 정도의 심각한 타격은 받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북한 당국이 보건·의료 부문에서의 방역 물자를 자발적으로 헌납하도록 독려하는 등 북한 내 물자 부족의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 고질적인 식량 부족으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내핍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평가된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정착하고 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군사적 평화 정착과 더불어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을 안정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남북한 사회통합의 비용을 분산시키고 북한 내의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수준의 안정을 꾀할 수 있

는 남북한 교류·협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 생산과 분배 정책의 변화가 주민들의 가계소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남북 교류·협력에 주는 함의를 탐색적 수준에서 모색하고자 한다.

2. 북한 가계의 소득 변화

북한 주민의 가계소득은 크게 공식 소득과 비 공식 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식 소득은 소속 직장의 공식 분배와 거주지 국가행정조직 차원에서 주어지는 국가 혜택이다. 북한 주민들은 소속 직장과 거주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기본 분배를 받으며, 개인이 아닌 가족 단위로 그 혜택이 전달된다(NK투자개발, 2021a, p.5). 비공식 소득은 개인 소토지 농사 등 매우 제한적인 영역에서만 존재했으나 2000년대 종합시장 이후 매우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대됐다. 북한 가계에서 공식 소득은 매우 미미한 규모로 일반 주민 대부분은 비 공식 부업에서 얻는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로 넘어오면서 종합시장 발달, 중국 무역 확대, 제조업 성장 등을 배경으로 일반 주민들의 비공식 소득 창출 기회가 크게 늘어났다.

한편, 김정은 시대 경제 성장에 따라 북한 가계의 공식 소득 분야에서도 일정한 확대가 엿보인다. 국영 생산 부문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소마다 명목임금을 일정하게 상향 조정하고,

현물 분배도 일부 늘린 것이다(NK투자개발, 2021a, p.6). 그렇지만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일반적인 가구의 가계소득에서 70~90%가 비공식 분야에서 얻어진다(NK투자개발, 2021a, p.8). 월별 가구당 비공식 소득은 북한 돈 최소 10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다양하다.

북한에서 분배는 ‘노동에 따른 분배’와 ‘국가 혜택 차원에서 분배’로 나뉜다(박석삼, 2004, p.15). ‘노동에 따른 분배’는 개인의 사회적 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의 분배이다. ‘노동에 따른 분배’는 개인이 투입한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여 그에 맞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북한에서 로임이라 부르는 일종의 임금은 국가에 의한 공식적 분배의 하나이다. 노동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는 노동의 종류에 따라 차이를 둔다. 북한 주민들은 배치된 직장의 유형에 따라 대략 농업과 일반 제조업, 서비스업 등 3개 부문에서 서로 다른 평가 기준을 받는다. 북한의 경제 부문을 기준으로 국영기업소, 협동농장, 편의봉사 부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 혜택 차원의 분배’는 국가가 전체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교육, 의료, 사회보험, 사회보장 등의 공적 혜택을 의미한다. 북한은 사회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주민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가계지출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선전해왔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가계 평균 소득이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이에 상응하여 가계지출 부담도 매우 낮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국가공급이 붕괴하면서 북한 가계소득에서 공식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해졌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생활 변화를 소득 차원에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공식 소득 부문의 변화를 파악해야 한다.

3. 북한의 시장화와 가계소득의 변화

가. 소비재 시장의 발달과 가계소득 증가

1) 북한의 소비재 시장 발달

북한 가계의 비공식 소득 증가는 소비재 시장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90년대 경제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경제 활동에 따라 소비재 시장이 확대되었고, 김정은 시대에 이르러 국가 차원에서 이를 체제 내부로 수용하게 되었다.

오늘날 북한 소비재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종합시장이다. 2003년 김정일 위원장이 ‘종합시장 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2004년 봄부터 북한 전역의 시군 구역마다 1개 이상의 종합시장이 들어섰다. 울타리, 지붕, 매대, 입구, 시장관리소가 갖추어진 상설시장으로, 지역 인민위원회 상업 부문이 행정관리를 담당한다. 여러 연구를 종합하면 북한의 종합시장은 평양 등 전역에 400개가 넘는다(홍민, 차문석, 정은이, 김혁, 2016, p.17). 과거에 외국에서 수입된 소비재는 국가가 운영하는 외화상점 등에서만 유통됐으나, 종합시장 등장 이후 각 지역에 판매소를 설치하여 수입 소비재도 종합시장에 들어왔다. 종합시장은 북한의 정권 수립 이후 최대의 고용 창출 효과를 유발했다.

2000년대 후반부터 개인들이 이윤의 일정 부분을 상납하면 국영상점을 실제로 경영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은 행정구역 단위인 시/구역 기준으로 ▲식량/식료 ▲경공업품 ▲채소 등 부식 ▲의약품 등의 전문 국영상점이 존재했다. 그러나 1990년대 국가공급 붕괴 이후 상점 운영이 어려워지자, 돈 많은 개인들이 국영기업소의 이름을 빌려 장사를 하게 됐다. 이어 국가 부문이나 외화벌이 기업들도 국영상점을 열어 돈벌이에 나섰다. 따라서 최근에는 종합시장과 큰 차이가 없다고 내부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국영상점이 얻는 그 이윤은 개인, 관리 기관, 국가 부문이 공동으로 분배한다. 특히 기업이나 기관 단위에서 상점을 설치하고, 실제로는 개인이 운영하게 하여 상점 사용료를 받는 방식도 늘어났다. 8.3 제품²⁾을 주로 판매하겠다는 아이디어로 시작된 직매점 역시 비슷한 운영 방식이다.

평양1백화점 등에서 일부 상품이 국정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이 역시 시장가격을 고려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형 판매점들은 사실상 시장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다만, 대형 판매점의 경우 건설 초기부터 일정한 규모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무역회사들의 투자를 받는 경우도 있다. 중국 자본이 직접 투자하는 방식의 합작도 이뤄진다. 국가나 지방 인민위원회 차원에서 시설을 현대화하고,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해서 직

접 판매하는 방식이다. 지방에서는 개별 상인에게 임대, 혹은 위탁하는 방법도 이용된다. 평양의 <광복거리상업중심>은 일종의 대형 마트로 초대형 국영상점이라고 볼 수 있다(NK투자개발, 2021b, p.15). 판매되는 상품의 상당 부분이 중국산 수입품이다. 채소나 수산물 등 신선식품 일부가 북한산이라고 전해진다.

2) 북한 주민의 소비와 가구 소득 증가

김정은 시대에 와서 북한 가계의 소비 수준이 크게 높아졌다는 것이 북한 내부 소식의 공통적인 분석이다(NK투자개발, 2021a, p.9). 물론 이런 추론이 북한 내부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배제하는 건 아니다. 식(食)생활과 의(衣)생활에서의 변화뿐 아니라 주거와 관련한 소비도 크게 달라졌다. TV, 전기밥솥, 가스레인지 등의 보급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 주민들도 집 내부를 꾸미는 인테리어나 고급 가구에 관심이 많다고 한다. 바닥용 장판, 도배지 등 중국산 인테리어 제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편, 종합시장을 선두로 하는 소비재 시장의 발달은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 증가 기회를 제공했다. 소비재 시장은 새로운 공급과 수요를 유발하며 많은 사람이 다양한 돈벌이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북한의 실질 고용 증가는 소비재 시장에

2) 북한에서 8.3 제품은 직장 내 부산물이나 폐기물 등을 재활용하여 계획 이외에 생산한 물품을 뜻한다. 1984년 8월 3일 김정일이 생필품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공장에서 나오는 여러 부산물들을 이용해 인민소비품 생산을 독려한 이후 8.3 제품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 주로 직장에 나가지 않는 가정주부나 노인들이 생산에 참여했는데, 이후 직장에 적당 두고 장사나 가내 생산 등을 통해 시장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8.3 노동자로 통칭하여 부르게 된다.

서 시작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소비재 시장의 발달은 다른 시장 부문의 발달도 촉진시켰다.

첫째, 소비재 시장의 발달은 단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생산’과 ‘소득’을 동시에 증가시켰다. 개인이 집에서 식료품을 만들어 파는 형태에서부터 신발이나 빗과 같은 소소한 생활필수품을 만들어 파는 가내 수공업까지 고루 발달했다. 이제는 국영기업의 제약 회사와 연계된 개인이 의약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있다. 가구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것도 있으나 개인들이 제작하는 것도 널리 팔리고 있다. 가내 수공업의 발달로 인해 집을 개조하여 작은 설비를 들이고 사람을 고용하는 공장제 수공업도 등장했다. 빵과 같은 소비재를 생산해 내는 개인도 늘어난 것이다.

둘째, 소비재 시장의 발달은 국영 공장기업소의 생산도 증가시켰다. 예를 들어 벽돌을 생산하는 국영공장은 벽돌을 만들어 시장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 도매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기존의 공장 시설과 노동력을 이용하여 개인들로부터 주문받은 기계를 생산하여 남은 이윤으로 소속 노동자들의 월급을 지급하는 공장기업소도 늘어나고 있다. 소비재 시장의 발달이 국영기업소의 실질적인 고용을 증가시키고 효과로 이어졌다.

셋째, 소비재 시장의 발달은 노동시장, 자본시장, 부동산 시장 등 생산요소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아무리 개인 생산이라 하더라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사람을 고용하고, 설비를 늘리는 것이 필수가 된다. 더 많은 생산을 위한 자금을 자본을 가지고 사금융을 펼치는 개인에게 빌리기도 한다. 소비재 시장 수요는 생산요소 시장의 발달을 촉진하는 것이다.

넷째, 소비재 시장의 발달은 서비스 시장의 발달과 관계가 깊다. 소비재는 유통이 필수이므로 소비재 생산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유통망 확대를 부른다. 유통의 요지에 도매시장이 생겨나고, 도매시장은 지역 소매시장의 공급지가 된다. 이런 방식으로 생산과 유통이 분화되어 유통과 관련한 다양한 직업이 등장했다. 북한의 유통을 상징하는 키워드는 바로 ‘씨비차’³⁾이다. 씨비차로 사람과 물류의 이동이 증가했으며, 이는 동시에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의 수요도 불러일으켰다.

나. 서비스 시장의 발달과 가계소득 증가

1) 북한의 서비스 시장 발달

북한은 서비스 역시 국가에서 공급하거나 지역 인민위원회에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편의봉사법」 제11조). 서비스가 국가공급 대상이므로 그 가격은 실제 무상이거나 무상에 가까운 수준으로 제공되는

3) 북한에서 각급 기관 및 기업소에서 이윤 창출을 위해 주민들에게 돈을 받고 차량을 운영하는 것을 씨비차(service-car)라고 부른다.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차량을 기관이나 기업의 명의로 돌리고 실질적으로는 운전수를 고용하여 일종의 운송업을 경영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1990년대 국가공급 붕괴로 인해 국방과 치안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서비스 부문에서 국가투자가 급감했다. 국가투자가 부실하니 서비스의 질과 양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전락했다. 그 결과 2000년대부터 종합시장을 거점으로 하는 민간 서비스 공급이 늘어났다.

종합시장의 등장으로 사람과 물류를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서비스의 수요가 생겨났으며, 이는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한 개인들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다. 서비스 분야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개인들의 소득이 조금씩 상승했고, 개인 소득의 증가는 미용이나 재봉 등 개인형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확대시켰다.

서비스 분야의 돈벌이가 잘된다는 믿음이 확산되면서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도 늘어났다. 국영 부문이 독점하고 있는 영업권을 개인들이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자기가 번 돈으로 투자를 하거나, 남의 돈을 빌려 투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서비스업을 시작했다. 특히 개인이 사업자등록 등 공식적으로 자영업할 수 없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뇌물 문화가 확산됐다. 북한의 뇌물문화는 소비재 시장보다 서비스 시장에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다. 소비재 유통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공급을 민간이 대신한다는 정치적 명분을 갖기 때문에 처음부터 강력한 통제 분야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비스 분야는 언제든 자영업화될 수 있다는 성격 때문에 ‘반사회주의’라는 명목으로 배척되던 분야였다. 따라서 초기 서비스 시장은 뇌물로 작동되는 경향이

강했고, 이런 분위기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뇌물 문화는 공식 소득에 대한 의존성이 높았던 북한의 간부층에도 영향을 미쳤다. 주로 국가 보위성이나 인민보안성과 같은 사법 영역의 간부들이 뇌물을 챙겨왔는데, 폭넓게 서비스 시장이 발달함으로써 행정 간부들까지 일종의 인허가 권한을 활용한 뇌물 챙기기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2) 개인 서비스업의 발달과 가구 소득 증가

북한 당국은 명목상으로는 서비스 산업을 여전히 국가에서 공급하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자금력과 운영 능력을 갖춘 개인이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획득된 수익의 일부를 국가 부문이 흡수하는 형식이다. 김정은 시대에는 민간이 주도하는 서비스 공급망의 확대가 북한 체제 유지에 불안 요소가 아니라는 경험적 판단이 강화되면서, 서비스 시장에 대한 국가의 느슨해진 측면도 있다. 시장 활동 참여자들은 이제 뇌물을 ‘세금’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비용으로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종의 뇌물을 주고 써비차를 이용하는 방식이 널리 퍼지다 보니, 북한 전역에 차량 운송에 대한 일종의 시장가격이 형성되었다. 일반 주민들은 이동 시 간부들에게 바치는 뇌물을 ‘교통비용’의 일부로 여기기 시작한 것이다.

서비스 시장에서의 개인 참여가 폭증하면서 서비스의 방식도 분화했다. 첫째, 기존의 국영 편의 봉사 영역에 제공되던 서비스를 개인들이 대

신 공급하여 사적으로 돈을 버는 경우이다. 세차장, 주유소, 자동차 수리점 등은 시장 원리로 운영되어 개인 고용 및 소득에 기여하고 있다. 둘째, 국영기업이나 국가기관이 주민에게 무상 혹은 국정 가격으로 공급하던 서비스를 개인이 제공하고 사적으로 돈을 버는 경우이다. 써비차가 대표적이다. 셋째, 과거 북한에 공식 부문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서비스로 개인이 돈을 버는 경우이다. 오토바이로 사람을 태워주거나 자동차로 짐을 운반해주는 영업은 국영 부문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서비스이다.

국영 편의 봉사 부문에 소속된 서비스 노동자들은 사업소를 통해 국가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할당받는다. 그 할당을 채우고 나면 나머지 수입은 모두 자기 몫으로 남는다(NK투자개발, 2021b, p.5). 과거 국정 가격으로 공급되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돈을 버는 개인은 인허가 및 영업 유지와 관련된 뇌물, 세금 등을 제외하고 자기 몫을 챙길 수 있다.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서비스로 돈을 버는 개인은 이윤의 대부분을 자기 몫으로 챙길 수 있다.

서비스업의 개인화는 다양한 형태의 돈벌이와 직업을 창출했다. 자동차/오토바이/자전거 등 이동 수단과 관련한 유지·보수 및 수리, 의류 수선, 이·미용 및 건강 서비스 등이 활발해졌다. 시장화에 따라 전반적으로 서비스 공급이 확대되는 가운데, 수리나 유지·보수, 미용, 재봉 등 국가에 의해서 공급되던 서비스업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다. 노동시장의 발달과 가계소득 증가

1) 노동에 대한 수요 변화

북한은 정권 수립 직후부터 개인의 노동을 강력하게 통제했다. 개인의 노동은 모두 사회적 노동으로 해석되어 집단과 국가의 통제 대상이었다. 개인 입장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됐고, 사회적으로는 노동시장에 대한 수요가 차단됐다. 그러나 1990년대 국가공급 붕괴로 인해 노동 부문에도 상당한 변화가 시작됐다. 국가의 노동 통제는 국가공급에서 당위성이 유지될 수 있다. 국가가 공급에 대한 약속과 책임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서 개인은 비로소 자신의 노동력을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활용하게 됐다. 소속 직장을 벗어나 개인 노동을 제공하지 않고서는 생존 자체가 불투명했다. 개인 소토지 농사, 소매장사, 서비스업 진출 등은 모두 개인의 생존을 위한 자구책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의 형성과 노동 공급의 기본 조건으로 무르익게 됐다.

종합시장의 발달과 시장화 흐름에 따라 노동에 대한 새로운 수요도 늘어났다. 시장화에 따라 사(私)경제가 발전하게 되면서 사적 노동이 필요한 분야가 늘어났다. 국경 밀수를 주도하는 무역회사나 화물차를 이용해 장사하는 도매상 등은 모두 개인적으로 사람을 고용했다. 써비차 운항, 휴대전화기 판매 등 서비스 분야에서도 사적 고용이 늘어났다. 국영 부문의 공식 소득에 의존하던 북한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돈벌이 기회로 작용했다.

북한은 2000년대까지 정규적인 소득이 거의 없는 실질 실업인구가 매우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이석, 2016, 4p). 김정은 시대에 시장경제가 확산되면서 이들을 고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여 사적 노동시장은 급속히 확장됐다. “개인 간 고용은 비사회주의 행위”라며 사회주의 노동 질서를 회복하려 했던 김정일 시대와 달리, 김정은 시대에는 이런 현상들이 폭넓게 용인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노동시장 및 노동에 대한 유연한 대응은 국영 서비스업에서도 발견된다. 과거 북한은 각 부문 집단별로 국가 과제를 할당했다면, 이제는 소속 노동자 개인별로 국가 과제를 부과하는 경우도 등장했다. 노동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만 채우면 나머지 시간에는 자유롭게 돈벌이에 나서 개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노동시장이 유연해지면서 국영 부문의 노동자 처우도 달라졌다. 국영기업소도 생산만 하면 이윤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일종의 숙련공에 대한 수요가 등장한 것이다. 노동시장의 발달은 국영기업소 노동자들의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는 데 일조했다.

2) 노동 수요 증가의 주요 분야

김정은 시대 북한에서 사적 노동이 가장 활발한 분야는 바로 무역 부문이다. 무역회사들은 국가로부터 발급받은 무역 와크⁴⁾ 기준으로 무역을 수행하는데 대부분은 공식/비공식 무역을 겸업

하고 있다. 무역회사들은 무역 자체에 대한 허가권만 갖고 있을 뿐, 국영기업소처럼 국가로부터 원부자재나 노동력을 공급받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무역회사들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여 이윤을 내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NK투자개발, 2021b, p.28). 무역회사들은 기존의 국영기업소 생산을 이용하거나 자체로 새로운 생산을 하청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고용이 일어났다. 무역 상품을 싣고 내리는 상하차 노동, 광물 수출을 위한 광산 노동, 수산물 수출을 위한 어업 노동 등에서 새로운 노동 수요가 발생했다.

교통/물류 분야에서도 노동 수요는 증가했다. 일단 화물차, 버스 등 이동 수단들이 증가하며 이를 운행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졌다. 특히 자동차를 실제 소유하거나, 자동차를 다루고 정비하는 사람들이 각광을 받게 되었다. 돈주, 운전사, 차장, 정비공 등 다양한 직종이 등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식당 등에서도 새로운 서비스 노동자를 요구하게 됐다. 운수업은 최근 북한 남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직종으로 꼽힌다. 소속 조직 생활 압박을 덜 받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얻기 때문이다. 뇌물을 통해 얼마든지 운전면허증, 운행허가증 등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직종과 관련한 제도적 장벽도 낮은 편이다.

국영기업소에 소속된 노동자들도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했다. 특히 중앙으로부터 생산량

4) 북한에서 해외무역거래 허가를 '와크'라고 부른다. 러시아어로 대외교역위원회를 뜻하는 '바트'에서 유래한 말로 추정된다.

압박이 덜한 지방 경제 소속 기업소 노동자들이 사적인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했다. 북한 돈 5,000원 전후의 명목임금만으로는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가장 흔한 형태는 이른바 '8.3 노동'이다. 노동자가 일정한 금액을 소속 기업소에 납부하고, 출근 의무를 면제받는 관행이다. 8.3 노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출근을 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돈벌이를 하는 '정액 납부' 형식이다. 둘째는 평소에는 출근을 하다가 개인적인 돈벌이 기회가 생길 때마다 결근하는 방식이다. 결근 기간에 따른 돈을 소속 기업소에 바친다. 마지막으로 '문서만 소속된' 형식이다. 원래는 그 기업소 소속이 아니었으나 자동차 등 운송 수단을 소유했거나, 중국에 유력한 무역 파트너를 알고 있다는 등의 특수한 조건을 갖춘 사람은 기업소에 적(籍)을 둘 수 있다. 평소에는 자유롭게 개인 활동을 하다가 기업소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기업소에 기여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형성과 발달은 비효율적인 국영기업에 묶여 있던 노동자들이 보다 생산성이 높은 직종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공식 소득에 비해 비공식 소득의 크기와 기회가 월등하다는 점이 노동시장 이동의 핵심 동력이다. 노동시장이 유연해지면서 해당 노동에 대한 시장평가가 높아졌으며, 다양한 소득 계층이 등장하게 되었다.

라. 사금융 시장 발달과 가계소득 증가

북한 시장화 현상 중에서 금융·외환 부문을 하나의 독립된 '시장'으로 설정하는 것은 여전히 논쟁적이다. 첫째, 북한에는 국영은행에서 금융·외환이 거래되고 있지만, 실제 북한 주민들의 이용률이 극히 낮다. 조선중앙은행을 비롯한 여러 개의 국영은행이 존재하지만, 개인 혹은 국영기업이 은행을 통한 저축, 대출, 송금 등의 서비스를 거의 이용하고 있지 않다. 둘째, 북한에는 아직까지 자산 거래 시장이 확립되지 않았다. 개인 간 주택 거래는 공식적으로 불법이며, 금과 같은 유색금속 자산은 개인소유가 금지되고 있다. 셋째, 개인 간의 금융 거래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제도나 법률에 의해 개인들의 금융 거래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금융시장을 북한 경제의 한 부분으로 선정하기에 무리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가계소득과 지출을 살피는 데 있어서 사금융 부문을 빼놓을 수 없다.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북한 시장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개인의 소득 뿐 아니라 자산 축적 과정을 추정하는 기초가 된다.

1) 북한 사금융의 형성과 돈주

김정은 시대에 상거래와 영업활동이 늘어나면서 개인의 창업이 늘어났다. 창업 과정에서 반드시 자본이 필요한데, 개인 간 돈을 빌려주거나 일정 지분을 투자하는 방법으로 자본 조달이 이뤄진다. 장사를 시작하려면 밑천이 있어야 하며, 수

레로 짐을 운반해주며 돈을 벌려면 수레가 필요하고, 오토바이로 사람을 태워주는 장사를 하려면 오토바이가 필요하다. 장사를 좀 크게 하려면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 이런 사업비용 혹은 창업비용과 관련한 자금 수요는 거의 대부분 '개인 대 개인' 간 금융 거래를 통해 해결된다(NK투자개발, 2021a, p.14).

북한에서는 사인(私人)뿐 아니라 국영기업소나 협동농장도 개인에게 돈을 빌린다. 자본을 가지고 사금융을 펼치는 사람을 흔히 돈주라고 하는데 이들에게 돈을 빌려 이자와 함께 현금으로 상환하거나, 생산물로 현물 상환하는 방법으로 국가 부문에서도 자금을 조달한다. 예를 들어 국가 부문에서 아파트 건설 사업을 벌이면 돈주에게 자금을 조달하고, 완공된 아파트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자본의 유통이 이루어진다. 돈주의 입장에서서는 현금이라는 유동성 자산을 아파트라는 부동산 자산으로 바꾸는 과정으로 이윤과 자산을 축적한다.

김정은 시대에 북한의 시장화가 활발해지면서 돈주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지칭하는 “돈주”는 그 개념이 매우 포괄적이다. 자본을 대여하는 사람 이외에도 일반 주민들은 자기보다 자산이 많거나 현금 동원력이 높은 사람도 ‘돈주’라고 부르는 걸로 추정된다(NK투자개발, 2021a, p.15). 돈주의 등장은 1990년대 말~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주로 씨비치를 운영하거나 혹은 도매 장사 등으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개인 대부업을 병행하

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북한의 경제 성장이 미비했으며, 소비재 시장은 이제 막 확대되는 시점이었고, 중국과 무역은 여전히 제한적이었다. 특히 김정일은 시장화 현상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따라서 돈주가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 형성되지 못했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 돈주의 돈벌이 규모가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첫째, 김정은 시대에는 종합시장에 대한 통제가 감소하면서 상품 거래가 늘어나고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됐다. 둘째, 원거리 물류 이동에 대한 통제가 사라지면서 북한 내부의 물류 이동이 많이 증가했다. 셋째, 중국 제품에 대한 수입 통제가 완화되면서 소비재뿐 아니라 중간재, 자본재에 대한 수입량이 증가했다. 돈주들의 돈벌이 대상이 늘어난 것이다.

최근 돈주의 행보에서 주목할 점은 ‘자금 유통’과 ‘자산 축적’ 측면이다. 김정일 시대까지 돈주의 본질은 장사였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다. 그러다가 김정은 시대에는 돈주가 생산 및 서비스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돈주가 제공하는 자금은 개인뿐 아니라 국영기업소의 생산에서도 큰 영향을 미친다.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데도 일조한다. 한편, 돈주는 주택이나 달러/위안화 등 외화로 자산을 축적한다. 돈주에게 자산 축적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것은 자본의 집중과 집적이 가능해짐을 의미한다. 향후에도 북한의 금융시장 성장이 점쳐지는 대목이다. 다만, 북한이 제도적으로는 여전히 사적 소유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돈주를 완전한 자본가

로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물론 북한의 권력층들이 일반 주민들에 비해 돈을 모을 가능성과 기회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분명하지만, 간부 계층에서 돈주가 출현했다고 볼 수는 없다. 김정은 시대에는 노동당 간부들이 공개적으로 장사에 나서기에는 당의 기강 잡기 분위기가 너무나 강력하다. 당 간부 등 고위층들은 이권이 있는 사업에 개입하여 직접 뇌물을 받든가, 아니면 국가 계획 추진 및 충성자금 조성 과정에서 ‘자기 몫’을 착복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무역회사 간부 역시 쉽게 돈주가 되지 않는다. 무역회사 간부는 다른 정치/군사/행정 부문의 간부들에 비해 국가지표 달성과 관련한 압박이 더 높다. 장사에 크게 한번 성공한다고 해서 그 이익 모두를 차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무역회사 간부들은 스스로 자본금이나 원자재를 확보해야 외화를 벌 수 있다. 권력을 활용하여 국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중국 진출 허가나 ‘무역 워크’와 같은 행정 조치 정도다. 무역 간부들이 익숙한 선택은 믿을 만한 돈주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무역회사 간부들은 돈주의 투자를 받고 무역을 진행하고, 관련 이익을 돈주와 분배한다.

간부의 배우자나 친·인척이 돈주로 성장하는 사례는 많다고 전해진다. 북한에서 장사로 큰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법기관의 단속이나 통제를 회피할 수 있는 권력 ▲국가정책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력 ▲중국과 북한 내부를 연결하는 데 동원할 수 있는 인맥 등을 갖고 있어야 한다. 배우자나 친·인척이 간부라면 당연히 적극적

인 보호와 편의를 제공받게 된다.

돈주의 출신 성분을 따져보면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계층이 바로 화교(華僑)이다. 조선족 포함, 중국 국적자 상당수가 문화대혁명 기간 북한에 정착했다. 중국인민해방군으로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에 잔류한 중국인도 소수가 있다. 이들은 북한군 입대, 대학 진학, 노동당 입당 등이 제한된다. 그런데 1990년대 국가공급 붕괴 이후 이들의 출신 성분이 오히려 돈벌이에 유리해졌다. 북한 당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화교나 화교 자손의 중국 방문을 연간 2회 정도 허용하고 있다(NK투자개발, 2021c, p.19). 이들은 중국의 친척으로부터 현금·현물 도움을 받거나 돈벌이를 할 수 있었다. 다만 코로나 19 발생 이후에는 이들 역시 출입국이 통제되고 있다.

화교 신분은 북한 내부에서도 일정한 이익이 있다. 첫째, 화교들은 중국 친척과 국제전화와 국제 편지 등의 교류가 가능했다. 둘째, 합법적으로 중국을 방문할 수 있는 화교들은 국경 도시들에 대한 접근 또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일반 주민들에 비해 엄청난 ‘이동의 자유’를 오래전부터 누려 왔다. 셋째, 북한 사회에 주류 계층에 편입될 수는 없었지만, 역으로 일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었다. 특히 ‘직장 출신 의무’에서 사실상 배제됐다. 결국 북한 사회의 의도적인 배제와 무관심이 오히려 화교의 경제활동 자유로 이어진 것이다. 2000년대부터 무역, 외화벌이, 대외합작 등 중국이라는 배경을 활용하라는 국가정책들이 제시됨에 따라 간부들 사이에서 화교의 몸값이

더욱 높아졌다. 화교가 누렸던 특수는 약 10만 명에 이르는 일본인 귀국자들과 극단적으로 비교된다. 일본인 귀국자들은 고향 친척 방문이 일절 허용되지 않았으며, 자본주의를 체험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일반 주민들보다 더한 통제에 시달려야 했다.

2) 사금융 발달의 영향

시장거래에서 많이 사용되는 화폐는 북한 원화가 아니라 위안화와 달러이다. 김정은 시대에 북·중 무역 증가로 위안화 사용 범위가 커졌다. 종합시장 물건 가격은 위안화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1위안, 2위안, 5위안 등 소액 화폐도 흔히 통용되고 있다. 달러의 경우 주로 10달러, 20달러, 50달러, 100달러 정도만 유통되는 것과 차이가 크다.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는 경우 사금융에서 그 이자는 일정하지 않다. 돈을 빌리려는 주체의 경제력, 담보물의 가치, 사업 아이템, 기간에 따라 이자가 정해진다. 개인 사금융이 발전하면서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연 이자율이 대략 25~40%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NK투자개발, 2021a, p.16). 북한에서 1년 이상 장기 대부는 흔치 않다고 한다. 아주 친하고 신용이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드물다. 북한의 시장이자율이 높은 것은 대부 자금이 대부분 단기성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사금융은 생산재, 소비재, 노동, 서비스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사금융이 공장

이나 협동농장에 유입됨으로써 이들의 생산도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생산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 고용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국가에서는 명목상 ‘고리대업’을 범죄로 간주하고 있지만, 돈주 자체에 대한 처벌이나 사회적 배제는 시도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가사업에 돈을 투자하는 돈주는 운이 좋은 경우에 김정은 표창도 받을 수 있다고 전해진다(NK투자개발, 2021a, p.17).

마. 부동산 시장의 발달과 가계소득의 증가

1) 북한의 부동산 시장 발달

원칙적으로 북한에서는 주택을 팔고 사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146조). 모든 부동산은 국가 소유이며, 개인이나 기업은 ‘이용권’만 보장받는다. 심지어 부동산을 빌려주는 것도 금지 사항으로, 이용하지 않는 부동산은 국가에 반납하는 것이 기본이다. 북한 당국은 1980년대부터 각 기관이나 기업이 자체적으로 주택을 지어 노동자들에게 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1990년대 국가공급이 붕괴하고 기관/기업소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신규 주택 공급이 대폭 감소하게 된다. 2000년대부터 경제가 회복되자 돈주 등 자산을 축적하는 개인이 신규 주택 수요자로 등장했다. 좋은 입지에 좋은 시설을 갖춘 주택을 보유할 경우, 장사에도 도움이 되고 삶의 질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 북한의 주택 거래는 개인이 주택 구조만을 변경해서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런데 2000년대 후반부터 김정일의 지시로 신규 주택 건설이 국가 차원에 추진됐다. 신규 주택 건설은 그 소유와 사용 방식과 무관하게, 인민들의 생활수준이 개선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최종에는 최고지도자의 치적으로 활용됐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개인이 신규 주택을 짓고, 돈주는 국가 주택 건설 사업에 자금을 대는 방식이 확산됐다. 신규 주택 건설 및 기존 주택 보수가 활발해지면서 개인 간 주택 거래, 혹은 주택 교환이 활성화됐다.

김정은 시대에는 국가기관의 명의를 빌려 신규 주택을 건설하여 개인에게 분양·판매하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했다(NK투자개발, 2021b, p. 45). 주택 이외에도 종합시장의 매대, 탄광, 광산 등 생산기지까지 다양한 부동산에 대한 실질 사용권이 거래된다고 한다. 부동산 시장은 건설 관련 신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다양한 원부자재 수요라는 파급효과를 불러온다.

주택 등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입지와 사용 편의성으로 나뉘 볼 수 있다. 입지와 관련해 중요하게 평가되는 부분은 ▲종합시장 등 상권 ▲씨비차, 열차 등 대중교통 편의성 ▲기반시설과 인접성, 학교나 행정기관 등과의 인접성 등이 꼽힌다. 사용 편의성으로는 ▲주택의 크기 ▲내장재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부업에 활용할 수 있는 추가 공간 등에 따라 가치가 평가된다. 주택의 경우 입지와 사용 편의성에 따라 집약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데, 거주자의 사회

적·경제적 지위에 따라 ‘간부동네’ ‘부자동네’ ‘노동자동네’ 등으로 구별되고 있다. 신규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존 주택을 개·보수할 정도면 어느 정도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모든 경제활동을 국가 계획에 따라 추진하기 때문에 주택 건설 역시 국가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 원칙이다. 모든 행정단위에는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부서가 존재하며 여기에서 해당 건설과 분양 계획을 집행한다. 그러나 국가 계획보다 앞서는 것이 최고지도자의 지시와 의지이다. 최고지도자가 건설을 지시한 평양시 중구역이나 만경대구역 등의 신규 아파트는 분양과 관련해서 지역 인민위원회나 국영기업소가 개입하지 못한다. 이런 곳은 체제 충성 계층의 사람들에게만 주택이 배정된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창전거리 아파트, 은하과학자거리 아파트, 미래과학자거리 아파트 등이 체제 선전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관이나 기업소도 주택 건설 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 기관이나 기업소에서 주택을 짓는다고 계획하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주로 자기 자본이 어느 정도 있고 간부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다. 기관 기업소가 주도하는 주택 건설에서는 자금의 대부분을 돈주 등 개인이 투자한다. 개인이 승강기 1대와 관련한 자재나 비용을 제공하면 완성된 아파트 1채를 분양해주는 식이다. “시멘트 5톤을 보장하면 아파트 1채를 내준다.”는 식의 거래도 이뤄진다. 김정은 시대에는 현물이 아니라 현금을 받고 새 주

택을 분양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고 한다. 현금 만 있으면 다양한 건설 자재를 종합시장에서 조달하거나 중국에서 수입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완공된 신규 주택의 일부는 국가에 바친다. 이런 주택은 최고지도자의 선물 명목으로 누군가에게 분양되기도 한다. 기관이나 기업소 입장에서는 인민들에게 신규 주택을 건설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자기 성과'가 된다 (NK투자개발, 2021b, p.48). 그러면서 주택 건설 사업 자체에서 이익을 남기기도 한다. 현금 투자가 많을수록 최종 이익도 늘어나게 된다.

지방 도시에서는 기관 기업소를 중심으로 개인들이 공동 투자하는 주택 건설도 추진되고 있다. 개인들이 돈을 모아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 이윤을 분배하는 것이다. 공동 자금으로 단층집 여러 채를 구매해 단층집을 허물고 그곳에 5~6층짜리 아파트를 세우는 전형적인 '재건축 사업'이다. 아파트 1층은 주로 상점용 공간을 배치하는데 이는 전형적인 중국식 건축 방법이다. 현재 (주)NK투자개발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 주택 내부 사진에서도 중국식 건축 방법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 건설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절차는 해당 인민위원회 간부들이나 사법기관 간부들에게 뇌물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한다.

2) 주택 시장 발달의 파급효과

주택 시장 발달은 건설업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개인들의 자산 축적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건

설업이 발달하면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 효과가 발생한다. 주택 건설 자체는 새로운 원부자재 수요를 키운다. 최종적으로 주택을 사고파는 것은 자산 축적의 효과도 있다. 주택 자산은 사금융에서 담보력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져 상대적으로 더 큰 사적 자본 유통을 촉진하게 된다.

반면 주택의 시장화는 계층화 주거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과거 국가로부터 배정받던 주택이 시장에서 거래의 대상이 되면서 비공식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 주거의 개선을 피하지 못하고 국가 역시 주택 건설의 상당수를 비공식 부문과 연결시키면서 무상 배정의 기본 틀이 이제는 작동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북한 주민 가계소득 변화의 함의

북한은 오랜 시간 자립 경제를 표방하고 글로벌 차원의 교류·협력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1990년대 경제난 이후 '시장화'가 30여 년 진행되면서 북한 경제·사회 체제는 1990년대 이전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장경제가 제공하는 경제적 풍요는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으며,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배태한 북한의 시장도 시장화 이후 이전보다 나은 경제적 풍요를 누릴 순 있지만, 모든 주민들이 공평하게 누릴 순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시장화 이후 북한에서도 소득 격차가 발생하고, 소득 격차는 부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것이며, 부의 불평등

은 기존 북한 사회가 관행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권력이나 신분과 재결합을 통해 다양한 사회격차를 발생시킬 수 있다(조성은, 2021).

2003년 북한에서 종합시장(market place)이 등장한 이후 관련 연구들은 북한에서 시장을 매개로 한 장사 활동이 소득 차이를 발생시킨다고 보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돈주’라는 개인 축재 상인에 주목하여 왔다. 여러 연구자들이 현재는 거시적 측면에서 북한 사회의 계층·세대·지역적 격차를 논하기도 하고, 미시적 측면에서 소득·주거·교육·정보·건강 부문의 격차를 추적·분석하고 있다. 물론 연구자마다 사회격차를 논증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사회 균열의 측면에서 갈등과 정쟁의 점화를 논하는 한편, 사회 다양성 측면에서 새로운 계층의 등장과 선진 사회로의 이행을 논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 최근 북한 사회에 대한 연구에서는 ‘혼종성(hybridity)’이라는 개념에서 단순히 계획/시장, 집단주의/개인주의, 사회주의/자본주의 이행 등의 이분법적인 관점에서의 변화 추적을 비판하고, 북한 사회를 모순적인 요소들이 공존하는 좀 더 불명료하고 우발적인 관계들의 구성체로 접근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한재현, 고유환, 2020; 북한혼종사회 연구단, 2021).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북한 가계의 소비는 김정일 시대와 비교할 때 큰 폭의 성장과 변화를 보이고 있다. 상당수의 북한 가계는 절대 빈곤 상황에서 벗어나 나름의 경제활동을 기반으로 소득과 자산을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는 소비 패턴을 통해 확인된다. 다만 이 변화는 고르게 나타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불균등하게 실현되고 있어 북한 내 계층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소비생활의 회복과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에 대한 눈높이 상향은 향후 남북 교류·협력에서 몇 가지 함의가 있다.

우선 1990년대 중반 이후 긴급구호 중심의 인도주의적 지원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던 대북 지원 사업은 향후 북한의 이해와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북한 당국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는 자신들을 구호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대외적인 자존감의 표현이었지만, 이에 더해 대북 지원 사업의 수혜자라 할 수 있는 북한 주민들 역시 단순한 구호물자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대상과 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조성은, 2021). 대표적으로 소비재를 생산하는 경공업 분야의 생산성 향상은 북한 당국의 이해와 주민들의 요구가 일치하는 지점이다. 북한이 경공업 분야에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고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활용하여 경제 분야를 도약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충분한 기술과 자원을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유엔의 대북제재로 물자의 지원은 대부분 막혀 있는 상황에서 우선 인적 교류를 통한 기술 이전 등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 경제의 시장화는 북한 내

에서 계층 간, 지역 간 격차를 벌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 예로 북한 영·유아 및 가임기 여성의 영양 상태를 나타내는 신체계측지표가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지역 간, 계층 간 영양불평등(Nutrition inequality)이 확인되고 있다(신희영 외, 2019, p. 411). 유니세프의 2017년도 MICS 조사 결과를 보면 만성영양실조율, 급성영양실조율 등이 도시보다 비도시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UNICEF, 2018). 고난의 행군 시절 마을 뒷산이나 텃밭 등 자연 자원을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는 비도시 지역이 식량 사정이 상대적으로 좋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는 도시 지역의 생활수준이 더 높아지면서 비도시 지역과 격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른 지표들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계층 간, 지역 간 격차는 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개발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북한이 인민 생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홍보하는 시설들의 상당수는 평양을 중심으로 한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남한이 서울을 중심으로 집중화되는 것만큼 북한 역시 평양에 자원을 집중하면서 평양 이외의 지역 개발은 소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대북 교류·협력에서 이러한 지역적 격차를 고려하여 북한 내 전략적 지역을 선택하여 지원·협력하고, 최소한의 모니터링이 수반될 수 있도록 기획 단계부터 협상을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동시에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식량·영양

영역에서의 교류·협력과 인도주의적 지원은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되어야 한다. 핵 보유를 추진하는 북한에 대해서 대북제재가 풀리기 전까지는 전면적 교류·협력은 어렵지만,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존·발달이 가능한 영양, 보건·의료, 교육 및 주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권적 차원의 지원은 다각도로 추진되어야 한다. 향후 남북 교류·협력은 단순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넘어서 북한의 낙후된 지역의 종합적 개발, 북한 인적 자본의 향상과 같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조성은, 2021). ㉮

참고문헌

- 박석삼. (2004). 북한경제의 구조와 변화.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금융경제총서 제9호**, 15-68. 서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북한혼종사회연구단. (2021). **북한의 사회변동과 혼종성 1**. 파주: 한울.
- 신희영, 이해원, 안경수, 최소영, 박샘나, 전유선 ... 정주. (2019). **2019년 개정판 북한 보건의료 백서**. 보건복지부·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 이석. (2016). 북한의 실제 취업률과 소득은 얼마나 될까? **KDI FOCUS 통권 제78호**. KDI 4.
- 조성은, 김예슬, 민기채, 김현진, 강미진, 윤지현 ... 현인애. (2021). **남북한 사회격차 완화를 위한 북한의 의식주 생활 지표 분석**. 세

- 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성은. (2021). 북한주민의 소비생활 변화와 함의. **이슈애포커스** 2021년 8월호.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재현, 고유환. (2020). 북한사회인식의 습속과 혼종성이라는 문제설정. **북한학연구**. 16(1), 113-157.
- 홍민, 차문석, 정은이, 김혁. (2016). **북한 전국 시장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KINU 연구총서 16-24.
- 홍제환. (2017). **김정은 정권 5년의 북한경제: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KINU 연구총서 17-18, 33. 서울: 통일연구원.
- NK투자개발. (2021a). **북한 가계 생계비 조사**. NK투자개발내부자료.
- NK투자개발. (2021b). **북한 산업별 시장화 현황**. NK투자개발내부자료.
- NK투자개발. (2021c). **북한의 코로나-19 대응과 교통 물류 현황**. NK투자개발내부자료.
- UNICEF. (2018). *2017 DPR Korea MICS*. UNICEF.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편의봉사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Changes in North Korean Household Income in the Kim Jung-eun Era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Cho, Sung-eun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Since Kim Jong-un took power, North Korea has greatly increased the opportunities for informal income generation, expansion of trade with China, and growth of manufacturing industries. As a result, it is known that most of the household income comes from the informal sector. The consumer goods market, service market, private finance market, and housing market expanded, and in the process, a labor market was formed and opportunities to obtain informal income expanded. The development of the market did not just increase 'consumption', but also increased 'production' and 'income' of individuals at the same time. It created various forms of earning money and jobs, and as the labor market became more flexible, various income classes appeared. Most North Korean households are getting out of absolute poverty and are increasing their income and assets based on their own economic activities. Therefore, the target and contents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that meet the North Korean people's rising expectations are required, and micro-support policies that take into account the gaps caused by stratification are required. The core of future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should be planned and promoted from a long-term and macroscopic perspective, such as comprehensive development of North Korea's underdeveloped regions and improvement of North Korea's human capital, beyond simple humanitarian aid.